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 5.

대한민국정부

목 차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I. 총괄표	3
II. 요약	9
III. 부처별	15
1. 정부위원회	15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5
나. 국가보훈부	16
다. 금융위원회	17
2. 법제사법위원회	18
가. 법무부	18
3. 기획재정위원회	19
가. 기획재정부	19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5. 외교통일위원회	22
가. 외교부	22
6. 국방위원회	23
가. 국방부	23
7. 행정안전위원회	27
가. 행정안전부	27
나. 소방청	28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9
가. 문화체육관광부	29
9. 보건복지위원회	31
가. 보건복지부	31
10. 국토교통위원회	32
가. 국토교통부	32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4
가. 농촌진흥청	34
나. 산림청	35
다. 해양수산부	36
라. 해양경찰청	37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8
가. 산업통상자원부	38
13. 공통사항	39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총괄표)

I. 총괄표

(단위 : 건수)

부 처 별	합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합 계	34	21	13
1. 정무위원회	6	5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2	1
국가보훈부	1	1	-
금융위원회	2	2	-
2. 법제사법위원회	1	-	1
법무부	1	-	1
3. 기획재정위원회	2	2	-
기획재정부	2	2	-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	1

부 처 별	합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1
5. 외교통일위원회	1	1	-
외교부	1	1	-
6. 국방위원회	2	1	1
국방부	2	1	1
7. 행정안전위원회	2	-	2
행정안전부	1	-	1
소방청	1	-	1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2	2
문화체육관광부	4	2	2
9. 보건복지위원회	2	1	1
보건복지부	2	1	1

부 처 별	합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10. 국토교통위원회	5	4	1
국토교통부	5	4	1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4	-
농촌진흥청	1	1	-
산림청	1	1	-
해양수산부	1	1	-
해양경찰청	1	1	-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	1
산업통상자원부	1	-	1
13. 공통사항	3	1	2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요약)

II. 요약

구 분	부 대 의 건 내 용	조치상황 (’25.04.3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민간의료보험 과다진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완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댐 소관 부처에 따라 주민지원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완료
	○ 국무조정실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시 부처별 해당 사업들의 목록과 향후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한다.	조치중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천안함 장병 생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조치완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PF의 연착륙에서 나아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완료
	○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대된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 및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금 충당 규모를 검토한다.	조치완료
법무부	○ 법무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조치중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지역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방향 조정을 검토한다.	조치완료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되면 예산 요구액의 합계 및 분야별 요구액 현황 등의 정보를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한다.	조치완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중
외교부	○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비비가 본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결산시 그러한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외교통일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치완료

구 분	부 대 의 건 내 용	조치상황 (’25.04.30)
국방부	○ 국방부는 777사령부 산하부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조치완료
	○ 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및 법무부 등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이행을 지원한다.	조치중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성과와 재정 관리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중
소방청	○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과 영업이익 활용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권도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중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중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한다.	조치완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영화 및 지역영화제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완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완료
	○ 보건복지부는 실제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재원·대상 및 도덕적 해이 등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사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조치중

구 분	부 대 의 건 내 용	조치상황 (’25.04.30)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조치완료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필수 공공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조치완료
	○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등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조치완료
	○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CTX-A 노선이 장래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치완료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조치중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4년 연속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 등 성과지표 미달사업이 다수이므로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한다.	조치완료
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헬기의 안정적 운용 및 향후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 헬기의 구입을 적극 추진한다.	조치완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체계와 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집행관리점검단 신설 등 집행을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조치완료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및 조직 보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과적인 마약탐지를 위한 특수장비 도입 등 지능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조치완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망의 관리운영을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투자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한다.	조치중
공 통	○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조치중
	○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조치중
	○ 정부는 2024년 예산감액으로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치완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부처별)

Ⅲ. 부처별

1.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관련 부처와 공조하여 민간의료보험 과다진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 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및 비급여 적정 관리 내용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발표(’25. 3. 19.)	조치완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댐 소관 부처에 따라 주민지원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24.10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산업부·환경부가 댐 주변지역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정 완료 - (對 산업부) ’27년부터 적용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기준 검토 시 발전댐과 다목적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조치 - (對 환경부) 발전댐 다목적 활용 시 주민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다목적댐과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25년말까지 마련토록 조치 ○ 조치완료일 : ’24년 10월 29일	조치완료
○ 국무조정실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시 부처별 해당 사업들의 목록과 향후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한다.	○ ’22년 10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되며, 향후 재검토*시 사업목록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임 ○ 조치예정일 : ’27년 10월	조치중

나. 국가보훈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국가보훈부는 천안함 장병 생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국방부 소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24.12.3.)에 따라, - 생존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 및 의원지원, 심리상담 지원 중 * 국방부 실무협의(’24.11.15)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일	조치완료

다. 금융위원회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PF의 연착륙에서 나아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으로 발표(’24.11.14일) ○ 조치완료일 : ’24년 11월 14일	조치완료
○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대된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 및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금 충당 규모를 검토한다.	○ 확대된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25년 예산 5천억원(전년대비 1,700억원 증액) 의결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필요시 현물출자 등 협의·추진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법무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검찰 예산을 정부 수립 이래 법무부에서 편성해 온 것은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것임 ○ 예산 편성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재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음 ※ ’21. 1. 검찰 예산 독립 편성 취지의 「검찰청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 ○ 조치예정일 : ’25년 12월 31일	조치중

3.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기획재정부는 지역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방향 조정을 검토한다.	○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년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중 *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발표(‘23.11월), ’24년 시행계획 수립(‘24.4월) - 시·도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방안과 더불어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기획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 앞으로 지방정부 주도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 내 지역간 안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도 추진 예정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지역거점 중심 투자를 제시* * 지역거점 중심 산업·정주여건·교육 투자로 지역균형발전 뒷받침 ○ 조치일 : ’25년 3월 25일	조치완료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되면 예산 요구액의 합계 및 분야별 요구액 현황 등의 정보를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한다.	○ 부처별 예산요구액 합계와 분야별 요구액 현황을 기 공개 - ’22년도 예산안까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 ’23년도 예산안부터 보도자료 미배포, 다만 국회 요청*으로 ’23년도 예산 안 이후 자료들도 국회에 기 제출 * ’24년 9월 결산국회, 국정감사 의결요구자료 등 ○ 조치일 : ’24년 9월 26일	조치완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적자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3월) ○ 조치예정일 : ’25년 9월 30일	조치중

5.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비비가 본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결산시 그러한 규모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외교통일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24년도의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음.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6.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국방부는 777사령부 산하부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 소속부대 징계조치 완료 - 777사 징계위 개최(’24.9.20)/ 일부 재심사(’24.10.28.) - 해병대 연평부대 징계위 개최(’24.10.23.) ○ 조치완료일 : ’24년 10월 28일	조치완료
○ 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및 법무부 등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이행을 지원한다.	(국방부) ○ 국방부 소관 권고사항(4건)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24.12.24.) - 담당부서별 이행 추진 (조치중) (행안부)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중 행정안전부 소관 5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국회 보고 완료(’24.12.24.)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24일 (국가보훈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아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일부)을 통해 의료지원 실시 중	조치중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생계 지원금 지급(’22년부터 매월 10만원)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31일 (법무부) ○ (권고사항 3)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광주시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 - ’24. 1. 5.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허위로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편향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 공판 중인 사건에 대한 적정한 구형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5·18민주화운동에 관련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범행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 (권고사항 6) 5·18민주유공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폐지 권고 -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5·18 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2021.5.27., 전원재판부 2019헌가17) - 피해자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 결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불법률상 근거가 사라져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장기소멸시효: 개정 불요] -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2018. 8. 30., 2014헌바148)을 하였고, ·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객관적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이미 5·18민주화운동 관련 불법행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장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어, 해당 장기소멸시효 규정 자체를 삭제할 필요는 없음 ※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단기소멸시효: 신중 검토 필요]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주관적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소멸시효) 규정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형사재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에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헌법재판소도 ①국가의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대해 단기소멸시효를 정할 필요성이 있고, ②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주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바 있음(위 2018.8.30., 2014헌바148) · 그러므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17일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와 유선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권고사항 이행 독려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31일	

7.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성과와 재정 관리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는 자치사무인 바, 자치단체 및 관련 위원회가 스스로 평가하고 지방의회·주민에게 환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주요재정사업평가) 현재 시행여부가 재량사항인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의무화 추진 ※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중(국회제출 완료, '24.9.) - (지방재정투자심사) 위법하게 추진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매뉴얼 개정)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 추진('25년 상반기) ○ 조치예정일 : '25년 6월 30일('25년 상반기)	조치중

나. 소방청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과 영업이익 활용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소방용품 법정 인증수수료 개선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24.4월~’25.1월 - (주요내용) 법정 인증제도의 수수료 산출체계 등 분석 및 개선 ※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따른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안 마련 예정(’25 상반기) ○ 취약계층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등 각종 기부금 예산편성 - 2025년 기부금 예산 90백만원 편성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31일(’25년 소방산업기술원 예산 승인)	조치중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권도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 태권도 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학교 형태’ 외 대안 협의 및 추진 예정 -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및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우선 실시 후 대안 추진 ○ 조치예정일 : ’25년 12월 31일	조치중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18~’23년)에 따라 진행된 많은 사업들이 종료되고,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건립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지연을 감안해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5년 12월 31일	조치중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한다.	○ 매장유산조사를 위해 지표조사를 실시((재)수도문물연구원) 했으며, 매장 유산 시굴조사 시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사가 아닌 현상대로 보존하는 의견이 있었음.(국가유산청, 청와대 권역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문화유산청 발굴제도과-5382, 2024.5.14.) 이에 향후 각 유존지역에 대한 건축공사 등 형질변경 시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4년 2월 7일 * 매장유산조사는 일반적으로 지표조사 → 시굴조사 → 발굴조사로 진행	조치완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영화 및 지역영화제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타 기금전입금 등 확보 추진 및 독립영화/영화제 지원사업 지속 지원 - ’25년 수입계획에 영화발전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타기금 전입금 645억을 반영하였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 - ’25년에 업계의견을 반영한 독립예술영화 제작·개봉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개선*, 영화제 지원사업 확대 편성 등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독립영화 지원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및 공모 일정 조정, 자기부담금 폐지 등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9.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 및 운영 지침 개정 * ’23년 57개소에서 ’24년 말 기준 101개소로 지정 확대 -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증액(’24년 47억원 → ’25년 96억원) -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25.1월 배포) * (주요내용) 미설치지역 확대를 위해 소아활성화 지역(소아인구 3만명미만) 지원 확대 및 소아진료 관심지역(응급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요건 신설하여 지원 강화, 인근 시·도 및 시·군·구간 연합 운영 허용 등	조치완료
○ 보건복지부는 실제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재원·대상 및 도덕적 해이 등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사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여러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27.6월까지 운영 예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 ○ 조치예정일 : ’27년 6월 30일	조치중

10. 국토교통위원회

가. 국토교통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24.11)하는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 ○ 조치완료일 : ’24년 11월 7일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조치완료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필수 공공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 공사비 상승으로 도로, 철도 등 필수 공공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공사비 현실화(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보정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24.12.23, 국토부·기재부 등)하여 발표하였음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23일 ○ (기획재정부) 적정한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물가반영 방식 합리화 등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24.12.23,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발표하였음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23일	조치완료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등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 ○ ’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등 지역경기 활력 제고 정책 발표 * (중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공시가격 3억원 → 4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 2억원 이하) ○ 조치예정일 : ’25년 01월 02일	조치완료
○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CTX-A 노선이 장래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자체에서 ‘5차 철도망계획’에 공식 건의 하지 않은 사업*으로 장래(6차) 철도망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식 건의하는 경우 검토 추진 * 공식 건의 기한(’24.5)이 종료된 상태로 철도망계획 수립 일정 등을 고려 시 신규 건의 불가 ○ 조치완료일 : ’24.5.29(광역철도 건의 기한)	조치완료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지역 간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 ○ 조치예정일 : ’25년 12월 31일	조치중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촌진흥청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농촌진흥청은 4년 연속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업 등 성과지표 미달사업이 다수이므로 성과지표를 철저히 관리한다.	○ [제도개선] 사업 책임관 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목표 관리체계 구축 - 책임관제도, 성과활용방안 등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4.11.28) 및 매뉴얼(’24.12.27) 개정 - 성과지표 산출방법 및 사업목적 비연계 지표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정의서 개정(’24.12.6) ○ [사업점검] 성과 목표달성도 중간점검 및 연구자 대상 전주기 성과관리 교육 - ’24년 수행 사업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중간점검(’24.8.31) 및 과제별 성과 모니터링 실시(’24.11.7) - 연구자 대상 전주기 성과관리 교육(’24.11.4) 및 정책제안 교육(’24.11.4) - R&D사업 연구수행 현황 및 성과모니터링 등 연차진도 관리 추진(’25.2.14) ○ 조치완료일 : ’25년 2월 14일	조치완료

나. 산림청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산림청은 산림헬기의 안정적 운용 및 향후 임차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 헬기의 구입을 적극 추진한다.	○ 신규 산림헬기 도입 시 국산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기술적으로 우수한 기종을 선정하여 기종 다변화 추진중 * 산림청에서는 2009년 이후 러시아제 헬기 미도입 * 기계약(도입기준) : (’24) 국산 수리온 2대, (’25) 미국 M234SP 1대, (’26) 미국 M234SP 1대, (’27) 국산 수리온 1대, 미국 M234SP 1대 * 도입가능 기종 : (대형) M234SP(시누크) / (중형) 국산 수리온, 이탈리아 AW-139 ○ 국산 수리온 2대 도입 완료(’24.12.20.) ○ 조치완료일 : ’24.12.20.	조치완료

다. 해양수산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체계와 추진방식을 전면 재 검토하고 집행관리점검단 신설 등 집행을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은 절차를 거쳐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재정지원시설(기반시설 등)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추진 중 - 진행 중인 항만재개발사업 2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이 지연된 광양항 묘도 재개발사업 재정지원시설(송배수, 폐수)은 설계결과 사업비 증가(추정 335억원→설계 685억원)로 인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진행 중인 예산당국과의 총사업비 협의 완료 즉시 공사 발주 및 면밀한 사업관리 추진 * 대상사업 : 광양항 묘도 재개발,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재개발 -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시설은 연결도로 공사 ’24.7월 착공 등 정상 추진 중임 - ’25년 예산반영 사업에 대해 집행관리점검단을 구성(’25.1)하고 상반기 집행점검 실시 완료(’25.3), 하반기 집행점검 등을 통해 집행을 지속 관리 ○ 조치완료일 : ’25년 3월 19일	조치완료

라. 해양경찰청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해양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및 조직 보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과적인 마약탐지를 위한 특수장비 도입 등 지능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 마약수사 전담인력 및 조직 보강방안을 위해 ’23년 5개 지방청 마약수사대를 신설하여 조직력 강화 및 해양 마약류 밀반입과 외국인 마약사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본청·지방청 마약수사대 26명과 경찰서 외사 인력 60명 포함, 마약수사전담팀 86명을 구성하여 시기·대상별 집중단속 추진 ○ 효과적 마약탐지를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에서 보유중이던 이온스캐너를 ’24년 7개 경찰서 보급, ’25년 7개 경찰서 추가 도입 진행 중으로 총 26대 확대 보급 및 ’25년 CCTV영상 축약프로그램 5식을 신규 도입하여 마약범죄 수사를 위해 특수장비 지속 도입 추진 ○ 해양 마약류 밀반입을 위해 선박 선저에 마약류를 부착하는 등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어 ’25년 상반기 수중드론 5개 지방청 도입, 하반기 주요 우범국을 출항·경유하는 선박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일제 선저검사 추진 등 마약류 은닉 의심 선박 사전 차단 ○ 중남미·동남아 주요 우범국과 국제협력 및 첩보채널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24년 제1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M-NIC) 개최 ※ 제1회 컨퍼런스 개최 현황 : 아태·아세안지역 11개국 및 국제기구 등 120여명 참석 (’24. 10. 30.~11. 1.) ※ ’25년 제2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예정(7월 중) ○ 조치예정일 : ’25년 4월 30일	조치완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망의 관리운영을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투자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한다.	○ 송배전망 투자는 현재 송·배전 운영자로서 한전이 전담하고 있음 - 투자 재원의 다각화는 재원의 종류, 회수방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 논의와 함께, 다각화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조치중

13. 공통사항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도입(‘24년)하는 등 사업방식을 적극 개선 중 * 공모방식 도입 완료(‘23.8월, 법 개정 / ‘24.2월, 시행) ○ 제4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6~’30)을 수립 중으로 그 과정에서 공항별 실태점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 관련 연구용역: 제4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6~’30) 수립 연구 추진 중 ○ 조치예정일 : ‘25년 12월 31일 - ‘25년 12월말까지 “제4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6~’30)” 수립	조치중
○ 정부는 각종 펀드출자 사업의 연말기준 실제 투자완료금액과 미투자금액을 매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펀드출자 사업의 미투자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청산된 펀드의 운용실적과 성과를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 향후 제출될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투자완료금액, 미투자 금액 등의 펀드 운용실적과 성과를 포함할 예정이며, 예산안 편성시 기존 재정모펀드의 재투자액을 감안하여 적정예산 규모를 산정토록 하겠음 ○ 조치예정일 : 차기 결산 사업설명자료 및 예산안 제출시 ○ (중소벤처기업부)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작성 시부터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실제 투자완료금액, 미투자금액, 청산펀드 운용실적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 ○ 조치완료일 : ‘25년 2월 28일	조치중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 정부는 2024년 예산감액으로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 (철도)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인입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인한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1월 7일 - ’25년 예산에 기본계획 완료 후 노반 설계착수를 위한 소요 54억원 반영 ○ (새만금공항) 기본설계 완료 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23.11~’24.6)으로 중단된 입찰절차를 재개(’24.4) 하여 현재 실시설계(’24.6~)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 마무리하여 ’25년 착공 예정(’29년 개항 목표) ○ 조치완료일 : ’24년 6월 17일	조치완료